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한국리서치」 공동기획 2020 한국인의 공공갈등 인식조사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5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6층
(공동대표 법인 · 김영임, 이사장 이선우, 소장 이강원)

한국리서치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97 H-Tower 2-11층(대표이사 노익삼)

수신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담당기자

발신 :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 한국리서치

문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02-742-5941 (소장 이강원)
한국리서치 02-3014-0082(전무 김춘석)

시행일 : 2020. 1. 13

제목 : <보도자료> 2020 한국인의 공공갈등 인식조사 결과 발표

『2020 제8차 한국인의 공공갈등 인식조사』

- 사용후핵연료정책재검토 등 공론화 활용에 대한 인식 조사 병행 -

제8차 한국인 공공갈등 인식조사 주요결과

- 10명 중 9명 우리사회 갈등 심각, 지난 8년간 변동 없어
- 갈등심각 1순위 이념갈등(85.1%)> 정규비정규직갈등(79.7%)>빈부갈등(79.5%)순
- 문재인 정부 4년차 갈등 늘었다 59.5%, 증가 이유 1순위 일방적 정책추진 (44.8%)
- 문재인 정부 4년차 갈등해소 노력하지 않다(52.6%), 부정인식 2017년 이후 최고
- 공론화 추진효과, 부정적 (39.1%) > 긍정적 (34.9%) > 잘 모르겠음 (26.0%)
- 10명 중 4명 이상(42.7%)은 사용후핵연료 재관리정책 공론화 과정·결과 전혀 몰라
- 경주 월성원전 공론화 인지도(응답자의 57.3%) 중 맥스터 증설 공론화 결과에 대해 재검토해야 (42.4%) > 잘모름 (30.3%) > 결과 존중해야 (27.3%) 순
- 국민대다수 공론화 절차 법제화 필요, 작년 대비 상승 81.1%(19)→87.3%(20)

- 국민의 절대 다수인 89.8%는 우리 사회의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6%에 불과함(보통 8.7%), 우리 사회의 집단 간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최근 8년 동안 개선되고 있지 않음

-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한 정도는 진보세력과 보수세력(85.1%) >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79.7%) > 못하는 사람과 잘사는 사람(79.5%) > 경영자와 노동자(77.8%) > 젊은 사람과 나이든 사람(60.8%) 등의 순임
 - 진보와 보수 간 이념갈등(88.4%(19)→85.1%(20), -3.3%p)의 심각성은 전년도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지난해와 같이 이념갈등 심각성이 1순위이며,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갈등(77.5%(19)→79.7%(20) +2.2%p) 심각성은 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함**

- 문재인 정부 4년차 갈등이 늘었다는 응답은 59.5%로 작년과 유사한 수준(59.6%(19)→59.5%(20), -0.1%p)이며, 갈등이 줄었다는 응답 7.1%보다 높음
 - 갈등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및 사업 추진 때문'이라는 응답이 (44.8%)로 가장 높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의 개혁 성향 때문에'(20.5%),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반대 세력 때문에'(17.5%), '경제·사회적 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에'(15.5%) 순으로 나타남. **문재인정부 4년차 갈등증가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반대 세력보다 일방적인 정책추진 이유 응답이 더 높음**

- 문재인 정부 4년차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2.6%로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47.4%)보다 높음.
 - 문재인 정부가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17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으며(26.5%(17)→47.1%(18)→48.3%(19)→52.6%(20)),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에 비해 높은 것은 2020년이 처음임**

- 2017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이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되고 있는 공론화에 대해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속의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응답이 58.2%, '공론화가 책임회피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 응답 54.3% 보다 높음.
 - 그러나, 공론화에 대한 긍정 응답은 2018년 이후 감소 추세임(65.3%(18) → 60.5%(19)→58.2%(20))
 - 또한, 공론화 추진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응답(39.1%)이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응답(34.9%)에 비해 높음(잘 모르겠다, 26.0%)

- 2020년에 진행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재관리정책 공론화'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7%가 '공론화 과정이나 결과를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과반 이상(53.6%)은 '공론화를 했다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응답자의 42.7%는 '공론화를 했다는 것을 처음 듣는다'고 하였음.
- 또한, 경주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던 **공론화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470명)의 42.4%는 공론화 결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이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0.3%,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은 27.3%임**
- 공론화 진행 여부 결정 방식으로는 '일정 여건을 구비하여 국민의 제안에 따라 결정한다' 55.0% >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27.4%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14.8% 순임.
- 한편, **공론화 절차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7.3%이며, 관련 응답은 2019년(81.1%) 대비 6.2%p 상승함**

I. 조사개요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이사장 이선우, 소장 이강원)와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는 우리 국민의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을 매년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13년에 이어 여덟 번째로 「2020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국민 대상 설문은 추적조사를 실시한 5개 부문과 올해 현안과 관련한 1개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5개 추적조사 부문은 <갈등에 대한 기본 인식>, <우리 사회 갈등수준 인식>, <공공갈등 해결 방안>, <주요 집단이나 사람별 갈등에 대한 책임 정도와 갈등해소 노력 정도>, <현 정부 갈등해결 노력 평가>이며, 1개 현안 부문은 <한국사회 갈등해소와 공론화 활용>으로 구성하였다.

• 「2020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24일부터 12월 28일까지 5일 동안 CAWI(Computer Aided Web Interview)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2020년 10월 현재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비례할당한 후 (주)한국리서치 응답자 풀¹⁾에서 무작위 추출을 하였으며,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II. 조사결과

1. 우리 사회 갈등 수준 인식

1) 전반적 갈등 수준 인식

우리 사회의 집단 간 갈등 수준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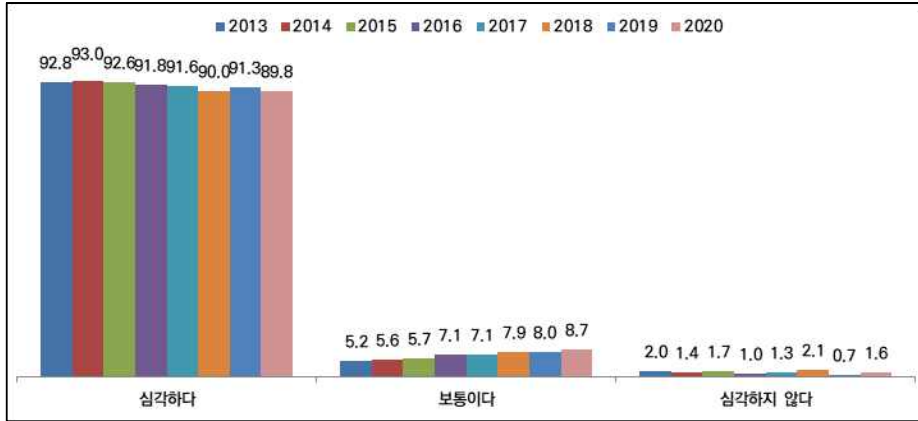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 아래와 같은 사람이나 집단 간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결과는 평균 7.6점(10점 만점 기준)이며, 이는 지난 2013년(7.6점), 2014년(7.7점), 2015년(7.6점), 2016년(7.7점), 2017년(7.5점), 2018년(7.6점), 2019년(7.7점) 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9.8%로, 국민 10명 중 약 9명이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 절대 다수는 우리 사회의 집단 간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며, 이러한 인식이 최근 8년 동안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본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한국리서치 응답자 풀(Master Sample)은 2020년 12월 기준 56만 여명이며, 통계청의 인종 과정을 거쳐 공공기관 발주 조사에서도 활용된 표본 프레임이다. 세계 최대 마케팅 여론조사 기구인 유럽마케팅여론조사협회(ESOMAR)의 응답자 풀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

(단위: %)



2) 집단 간 갈등 수준 인식

14개 갈등 집단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심각한 정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진보 세력과 보수세력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8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79.7%), 못사는 사람과 잘사는 사람(79.5%)과 경영자와 노동자(77.8%)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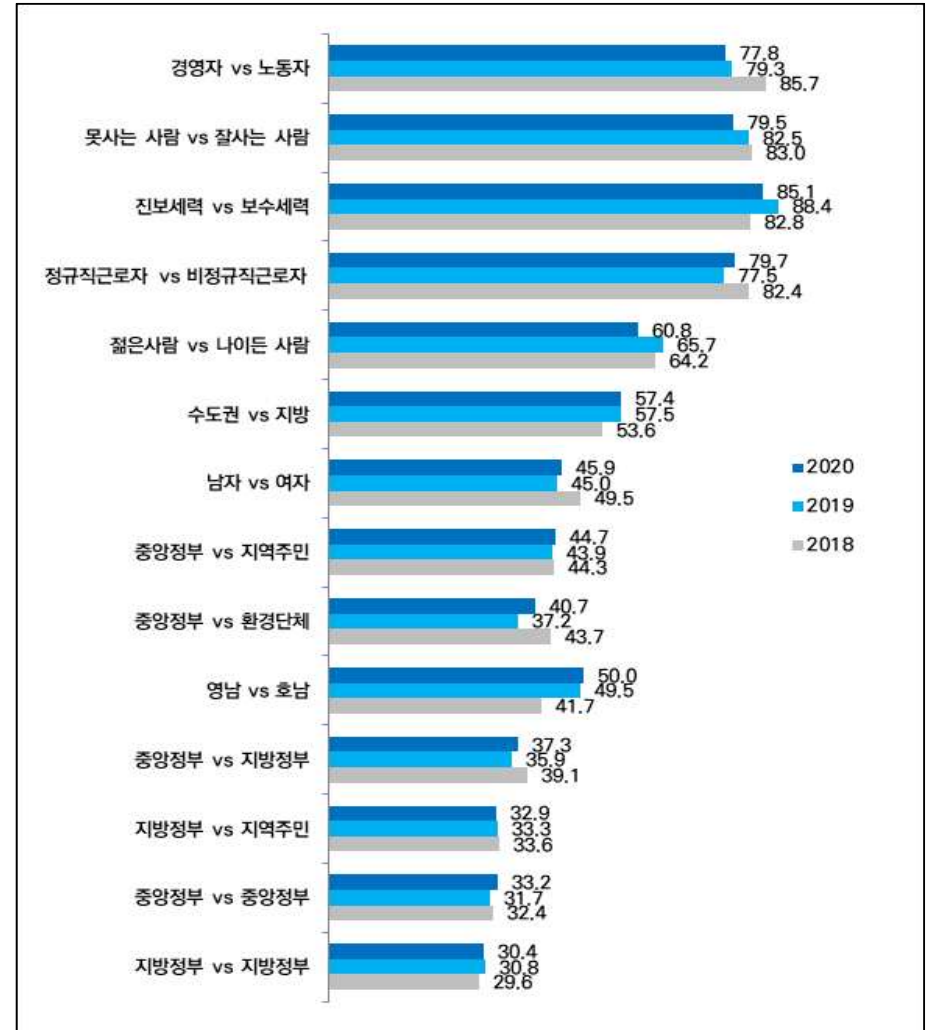
2020년 조사결과에서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 간의 갈등(88.4%('19)→85.1%('20), -3.3%p)**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진보-보수 간의 이념갈등은 14개 갈등 집단 중 '갈등이 심각하다'의 응답이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응답이 2013년 이후 줄곧 80% 이상이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은 이념갈등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갈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검찰개혁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의 장기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따른 검찰총장의 징계를 둘러싼 진보 및 보수진영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사회적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갈등 중 중앙정부와 환경단체 간의 갈등과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양상이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환경단체 간의 갈등 응답은 전년도 대비 3.5%p 상승(37.2%('19)→40.7%('20))하였으며,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 간의 갈등은 전년도 대비 2.2%p(77.5%('19)→79.7%('20)) 상승하였다.** 중앙정부와 환경단체 간의 갈등은 2013년 조사 당시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이 62.1%에서 2019년 37.2%까지 점차 낮아졌지만, 2020년 40.7%로 다시 반등하였고,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은 2015년 85.2%를 정점으로 2019년 77.5%까지 줄곧 낮아지다가 2020년 79.7%로 다시 높아졌다. 특히 **2020년 조사에서는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 간의 갈등의 심각성이 2순위로 집계된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보안검사요원)**

의 정규직전환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 집단 간 갈등의 심각성 인식(최근 3개년)>

(단위: %)



<우리 사회 집단 간 갈등의 심각성 인식(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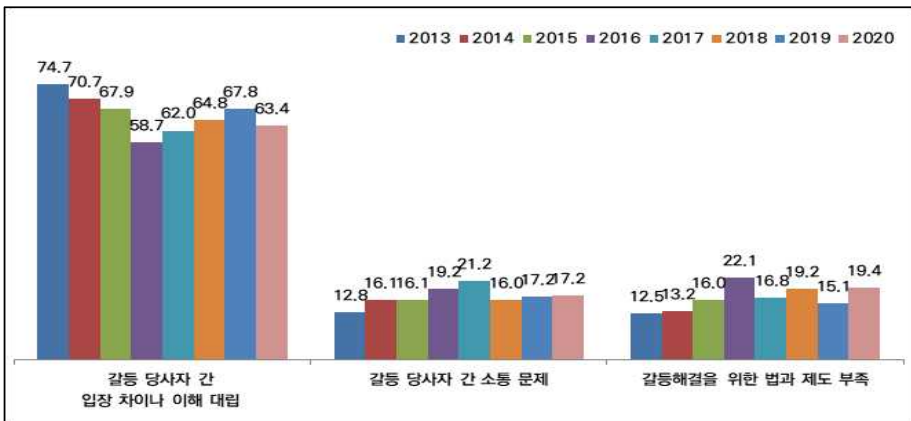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영자 vs 노동자	84.1	84.6	85.7	86.6	87.0	85.7	79.3	77.8
못사는 사람 vs 잘사는 사람	86.1	88.9	86.0	85.5	84.7	83.0	82.5	79.5
진보 세력 vs 보수 세력	89.3	87.4	86.4	81.4	84.3	82.8	88.4	85.1
정규직근로자 vs 비정규직근로자	84.2	82.9	85.2	84.8	84.6	82.4	77.5	79.7
젊은 사람 vs 나이든 사람	61.1	64.1	64.0	68.9	66.1	64.2	65.7	60.8
수도권 vs 지방	50.2	50.0	50.6	51.5	55.0	53.6	57.5	57.4
남자 vs 여자	29.0	28.2	30.7	45.8	40.6	49.5	45.0	45.9
중앙정부 vs 지역주민	50.6	50.1	50.7	55.3	44.7	44.3	43.9	44.7
중앙정부 vs 환경단체	62.1	61.4	57.2	56.7	45.5	43.7	37.2	40.7
영남 vs 호남	51.9	61.5	51.3	52.7	50.7	41.7	49.5	50.0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53.3	52.7	53.5	55.1	42.7	39.1	35.9	37.3
지방정부 vs 지역주민	37.8	38.5	39.0	38.6	35.2	33.6	33.3	32.9
중앙정부 vs 중앙정부	35.4	41.8	36.8	40.0	31.6	32.4	31.7	33.2
지방정부 vs 지방정부	33.1	36.3	34.7	38.4	30.5	29.6	30.8	30.4
전반	92.8	93.0	92.6	91.8	91.6	90.0	91.3	89.8

3)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

국민 10명 중 6명 이상(63.4%)은 '우리 사회에서 집단 간의 갈등은 갈등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입장 차이나 이해 대립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이어 갈등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 등이 부족(19.4%), 갈등 당사자 간에 서로 소통이 부족(17.2%)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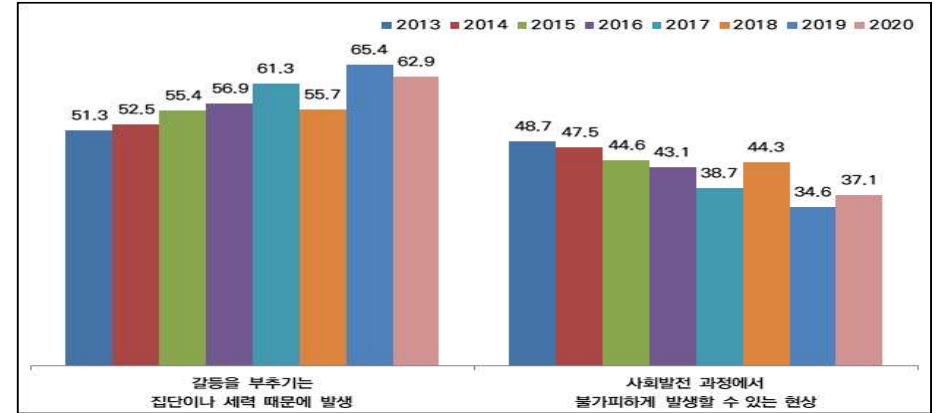


4)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입장

집단 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갈등을 부추기는 집단이나 세력 때문에 발생한다'(62.9%)는 입장이 '사회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37.1%)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77.9%)은 집단 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인식하며, 최근 들어 갈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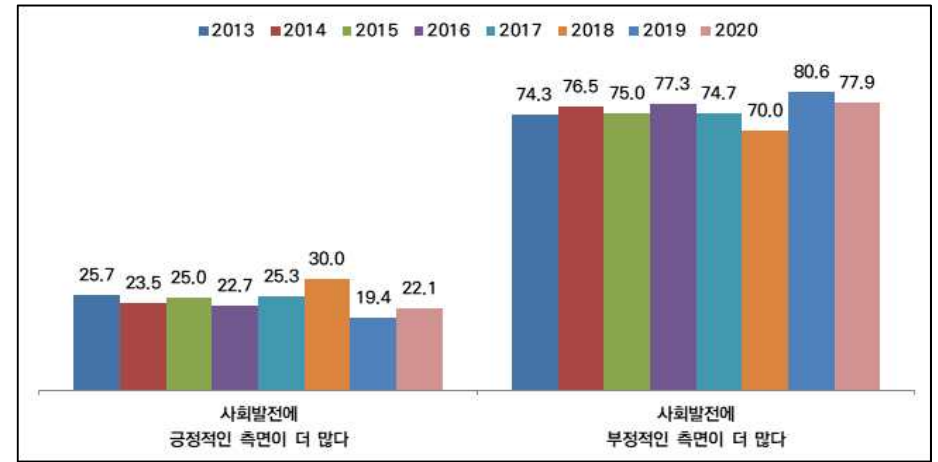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입장>

(단위: %)



<집단 간 갈등과 사회발전의 관계에 대한 입장>

(단위: %)



2. 주요 집단 사회갈등 책임도와 갈등해소 노력도

1) 주요 집단 사회갈등 책임도와 갈등해소 노력도

11개 집단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에 책임이 있는 정도를 알아본 결과, **국회라는 응답이 90.9%로 가장 높았고, 언론(86.1%)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중앙정부(83.9%), 법조계(75.5%), 대통령(75.0%), 지방정부(74.5%), 노동계(67.7%), 재계/경영계(66.7%), 시민단체(65.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종교계, 학계는 책임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었다.

또한, 같은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 갈등 해소 노력도**를 알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평가가 저조한 가운데,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36.9%로 가장 높고, 중앙정부가 33.3%로 그 뒤를 이었다.** 지방정부(26.9%)와 시민단체(22.0%)도 상위그룹을 차지하였다. 반면, **재계/경영계 및 노동계(각 16.0%), 종교계 및 학계(각 14.8%), 법조계(13.4%), 국회(11.7%), 언론(10.7%)은 사회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지난 201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대통령의 사회갈등 해소 노력도는 37.8%에서 36.9%로 0.9%p 소폭 하락하였고,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집단의 사회갈등 해소 노력도는 전반적으로 모두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문) (책임도) 아래와 같은 집단이나 사람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 갈등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 (노력도) 아래와 같은 집단이나 사람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 갈등 책임도와 사회 갈등 해소 노력도>

(단위: %)

	책임도(책임이 있다)	노력도(노력하고 있다)
국회	90.9	11.7
언론	86.1	10.7
중앙정부	83.9	33.3
법조계	75.5	13.4
지방정부	74.5	26.9
노동계	67.7	16.0
대통령	75.0	36.9
재계/경영계	66.7	16.0
시민단체	65.3	22.0
종교계	60.6	14.8
학계	51.4	14.8

2) 주요 집단 사회갈등 책임도와 갈등해소 노력도 Portfolio

<사회 갈등 책임도와 사회 갈등 해소 노력도 Portfolio>



11개 집단의 사회갈등 책임도와 사회갈등 해소 노력도를 교차하여 비교한 결과는 상기 그림과 같다. 대통령은 사회갈등 책임도가 낮으면서 사회갈등 해소 노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기관에 비해 사회갈등 관련 우수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국회, 언론, 법조계는 사회갈등 책임도는 높게 인식되지만, 노력도는 낮게 인식되는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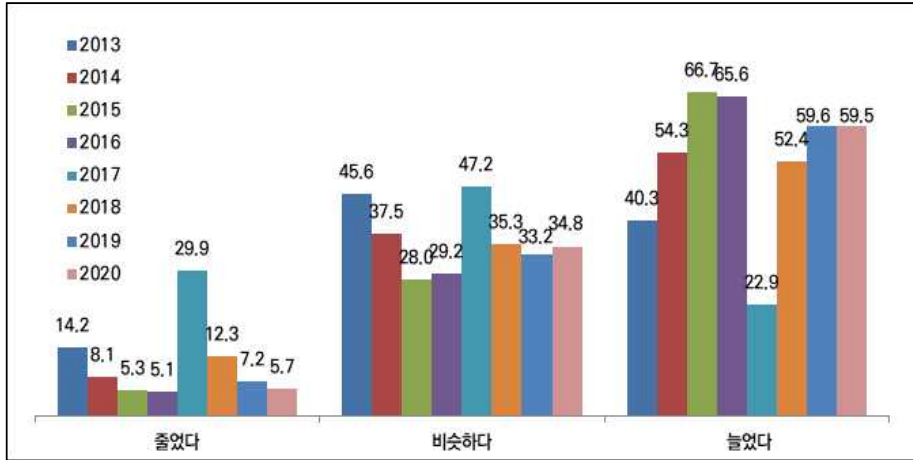
3. 문재인 정부와 사회갈등

1) 문재인 정부의 갈등 정도와 갈등해소 노력 평가

문재인 정부의 갈등 정도에 대한 2020년 평가를 살펴보면 '갈등이 줄었다'는 5.7%, '갈등이 늘었다'는 59.5%이다. **갈등이 늘었다는 응답이 줄었다는 응답보다 현저히 높으며, 전년도 대비 응답 비율의 차이는 조금 줄어들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집단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은 47.4%,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2.6%**로 나타나,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박근혜 정부(2013~2016년 조사결과) 대비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조사결과에서는 사회갈등 관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점차 국민의 비판적·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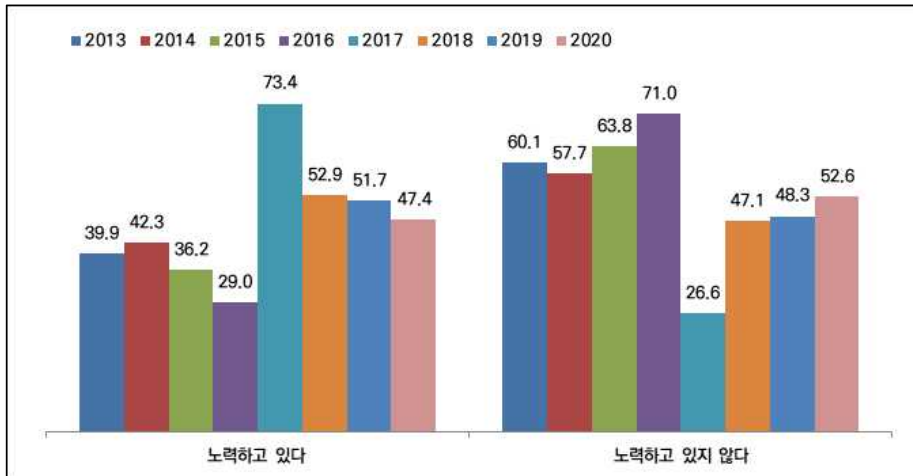
<이전 정부 대비 문재인 정부의 갈등 증감>

(단위: %)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갈등해소 노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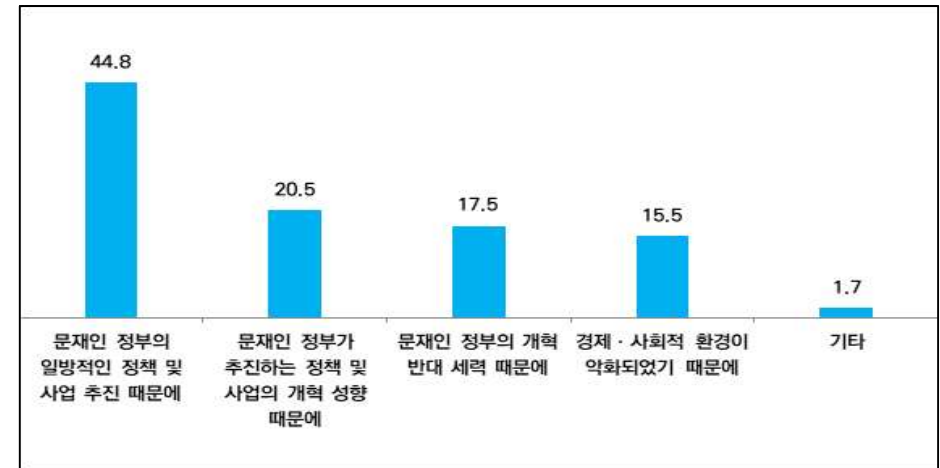


2) 갈등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문재인 정부의 갈등 정도에 대해 2020년 평가에서 '갈등이 늘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595명을 대상으로 갈등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을 진행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및 사업 추진 때문'이라는 응답이 4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의 개혁 성향 때문에'(20.5%),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반대 세력 때문에'(17.5%), '경제·사회적 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에'(15.5%) 순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4년차 갈등증가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반대 세력보다 일방적인 정책추진 이유 응답이 더 높았다.**

<갈등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Base=갈등이 늘었다고 응답한 응답자)



4. 한국사회 갈등해소와 공론화 활용

2017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이후, 2018년 교육부 대입제도 개편방안,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여부 공론화, 2019~2020년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대책 공론화, 2020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등 국가와 지방정부 정책결정과정에서 공론화절차가 확대되고 있다. 공적이익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된 공공의 의견을 일컫는 공론을 형성해 가는 과정인 '공론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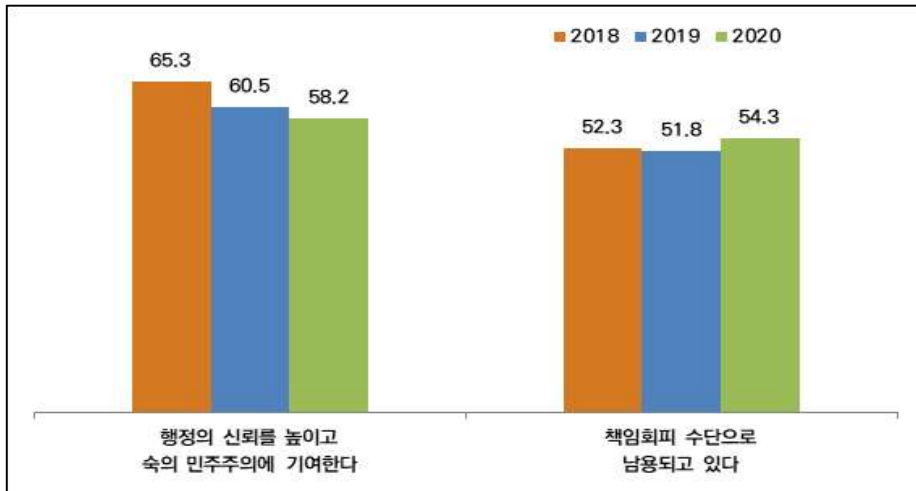
1) 공론화에 대한 의견

공론화가 시민참여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결과 '공론화는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속의 민주주의에 기여한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58.2%로,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은 공론화가 시민이 직접 현안에 대해 학습과 토론을 벌이며 의사를 조율하는 속의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반면, '공론화가 책임회피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54.3%로, 국민 10명 중 5명은 공론화가 정책 결정의 부담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론화에 대한 의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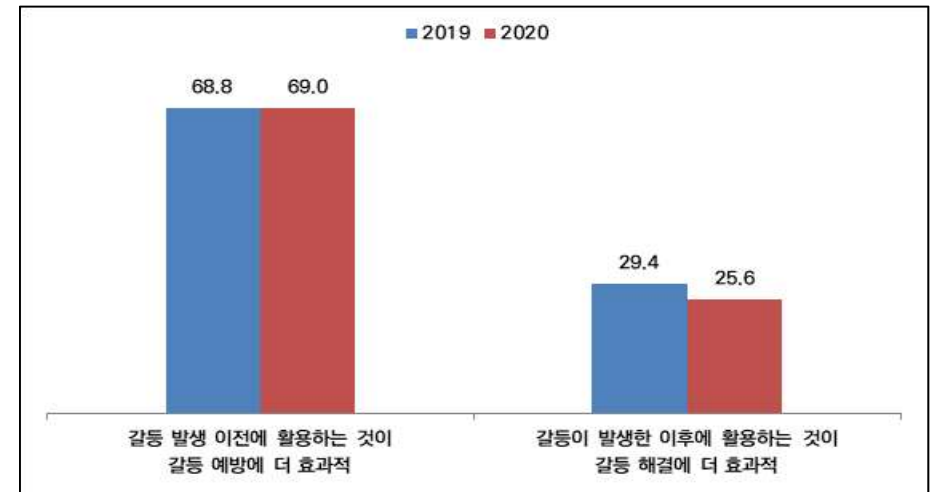


2) 공론화 활용 효과에 대한 의견

공론화는 특정 사안에 이해관계를 갖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절차(과정)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갈등이 발생한 이후 갈등을 해결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공론화 활용 효과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결과 '공론화는 갈등 발생 이전에 활용하는 것이 갈등 예방에 더 효과적이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69.0%, '공론화는 갈등이 발생한 이후에 활용하는 것이 갈등 해결에 더 효과적이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25.6%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6명은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갈등 발생 이전에 공론화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공론화 활용 효과에 대한 의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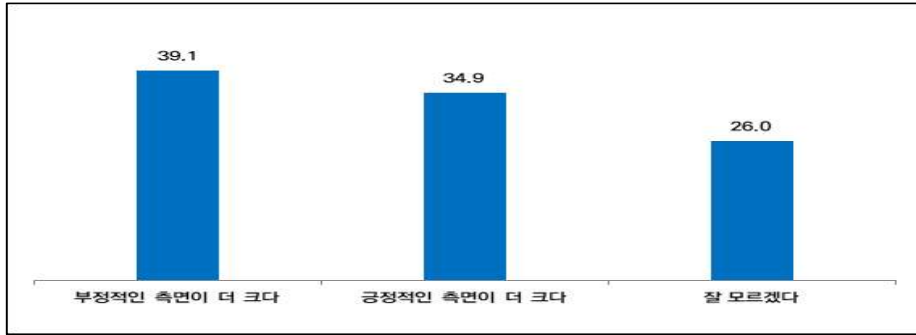


3) 다양한 공론화 추진 효과에 대한 의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2018년 교육부 대입제도 개편방안,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여부 공론화, 2019~2020년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대책 공론화, 2020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등 다양한 공론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정책결정, 갈등조정 측면에서 공론화 추진 효과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결과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라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34.9%), '잘 모르겠다'(26.0%) 순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공론화 추진 효과에 대한 의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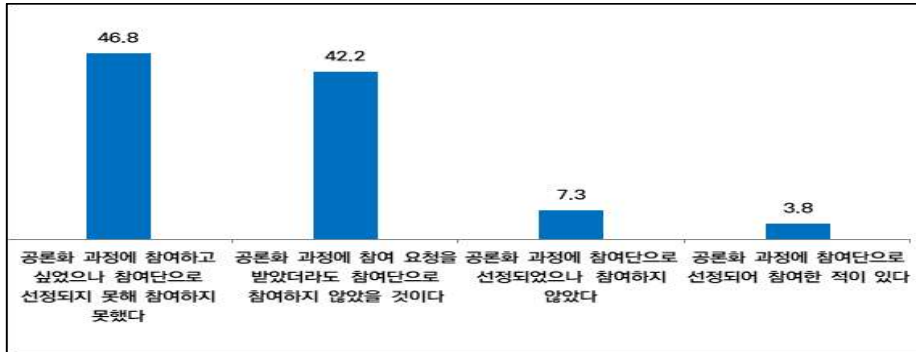


4) 지난 1년간 공론화 과정 참여 여부

지난 1년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관련하여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한 의사결정 및 정책평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8%가 '공론화 과정에 참여단으로 선정되어 참여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46.8%가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참여단으로 선정되지 못해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응답자의 7.3%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단으로 선정되었으나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42.2%가 '공론화 과정에 참여 단으로 선정되었으나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지난 1년간 공론화 과정 참여 여부>

(단위: %)



5)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대한 인지 및 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사용후핵연료²⁾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2020년에 전국 공론화와 경주 지역 공론화를 시행하였다. 이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7%가 '공론화 과정이나 결과를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공론화를 했다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다'라고 53.6%가 응답, '공론화를 했다는 것을 처음 듣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42.7%로 나타났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인지 정도>

(단위: %)



지난 7월 재검토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통해 도출해낸 경주 월성 원전 맥스터³⁾ 증설이 필요하다는 결과 도출로 인한 논란에 대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573명 중 8.1%가 '논란이 되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논란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라고 73.8%가 응답, '논란이 있다는 것을 처음 듣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8.0%로 나타났다.

<경주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논란 인지 정도>

(단위: %, Base=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인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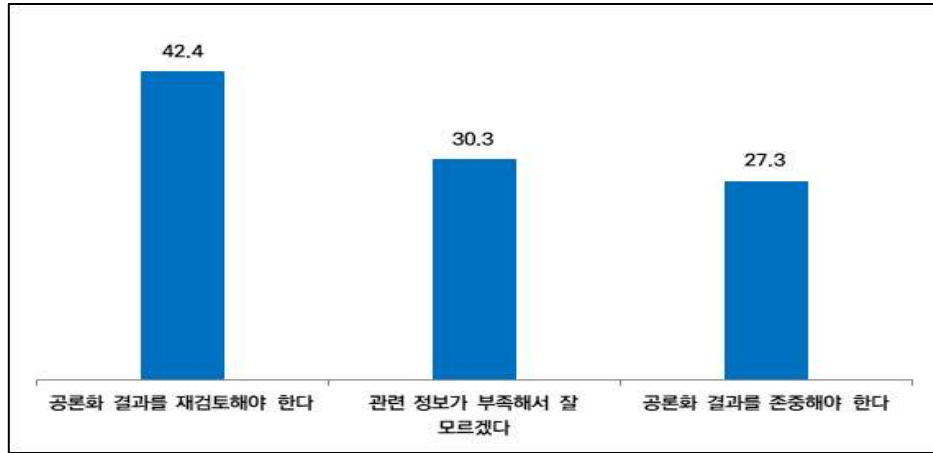
이와 같은 공론화 결과에 대해 경주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논란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470명 중 42.4%가 '시민참여단 공론화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서 공론화 결과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은 공감을 나타냈다. 이어 '관련

2)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나면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뒤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 이른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말한다.
3) 맥스터(MACSTOR)는 경주 월성 원전 내에 배출된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저장하는 구조물을 의미한다.

정보가 부족해서 잘 모르겠다'(30.3%), '관련 정보에 대한 학습과 토의 등 숙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경주지역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27.3%) 순으로 응답하였다

<경주 월성 원전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입장>

(단위: %, Base=경주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논란 인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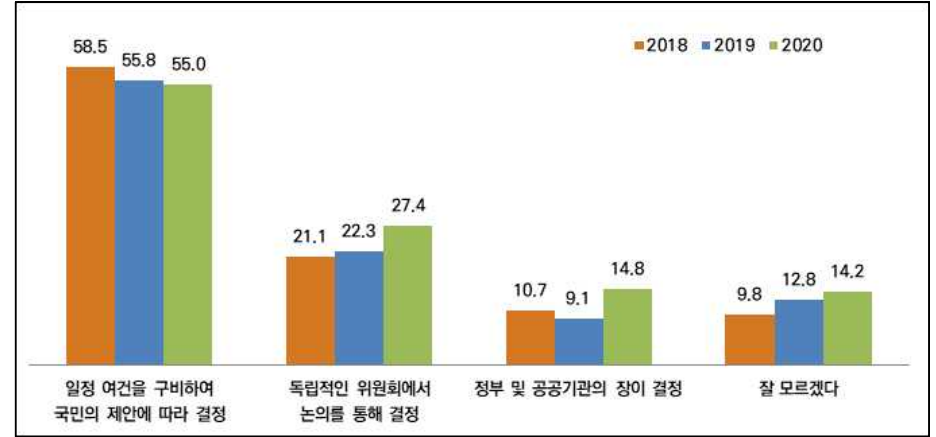


6) 공론화 진행 여부 결정 방식⁴⁾

공론화 진행 여부를 누가 결정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사안에 대한 공론화 여부를 결정하는 바람직한 형태로 국민 10명 중 5명 이상(55.0%)은 '일정 여건을 구비하여 국민의 제안에 따라 결정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어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27.4%),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이 결정한다(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론화 진행 여부 결정 방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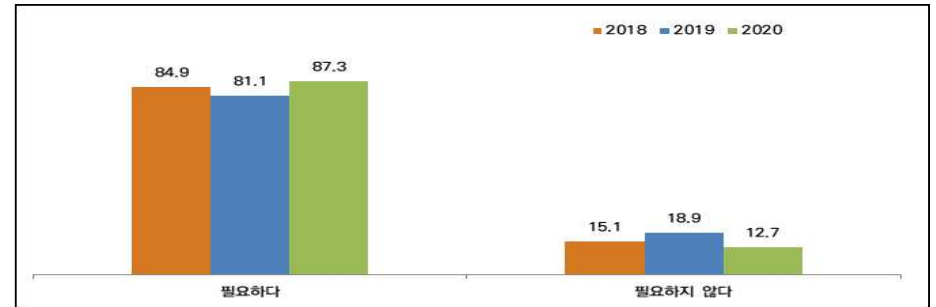


7) 공론화 절차 법제화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론화 절차 등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7.3%,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2.7%로,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공론화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 대비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더 높아졌다.

<공론화 절차 법제화>

(단위: %)



4) 공론화 진행 여부 결정 방식에 대한 질문은 2018년, 2019년 조사에서는 단수 응답 문항으로 진행되었으나, 2020년 조사에서는 복수 응답 문항으로 변경하여 질문하였음. 이에 따라 2020년 각 수치의 총합은 100%를 초과할 수 있음.